"자치 훼손" vs "비리 온상"… 제도 보완은 공감

다시 불붙은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

진보 "입후보자 교육·행정경력 조항 부활해야"

보수 "임명제나 제한적 주민 직선제로 바꿔야"

광주시의회 14일 진보·보수 모두 참여 토론회

충남교육감의 비리를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차기 교육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간, 진보와 보수 간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이 가세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9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됐고, 교육의원 제도는 아예 폐지됐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의 제정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명시됐다.

이같이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한데다, 민선 교육감들의 비리마저 잇따르면서 직선제 폐지 주장이 거세져 교육계와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법이 졸속으로 개정돼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현행법대로 선거를 실시한다면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자도 일반선거의 입후보자처럼 특별히 교육경력이 없어도 되며, 교육의원 제도는 아예 없어지게 된다"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점점 훼손돼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 자격에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직선제 폐지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등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교육계 안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성명에서 "계속되는 교육감 비리에 우려하며 막대한 선거비용과 교육의 정치 예속화 등 폐단과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낮은 인지도, 투표용지의 기호 문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안으로 ▲선거공영제 도입 등 직선제 보완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주민 직선제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이 거세지자 광주시의회는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직선 교육감 존폐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계 진보와 보수가 모두 참여한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의원이 사회를 맡고, 성병창 부산교육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박이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조연희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의견을 나눈다.

정희곤 광주시의원은 "교육자치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데도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자치를 걱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데 토론회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백제실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2014년 지방선거와 시민사회 역할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법, 박주선 의원 파기환송 의미는?

사전선거운동 판단 누락 다시 심리

핵심 쟁점사항은 사실상 무죄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64·무소속·광주 동구)에 대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경선운동 과정에서 유사기관과 사조직을 설립 운영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선고를 수긍하면서도 공소가 제기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재판을 누락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박 의원 측은 핵심쟁점이 모두 무죄라는 원심을 대법원이 인정한 만큼 사실상 무죄 확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화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는 별도 사건인 지난해 4·11총선 전 동구 경선운동과 관련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의 박 의원 지지 행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박주선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무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계림1동 비상대책위원회,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과 같은 유사기관과 사조직을 설립·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의 핵심쟁점들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판단을 통해 원심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이용에 무죄를 인정, 쟁점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문제로 간단한 심리만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결론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보도자료를 통해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며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이지만 경위야 어떻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파기환송=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원심, 즉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하도록 2심 법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것.

"내년 지방선거 시민후보 추천 신중해야"

광주시민단체협, 시민사회 역할 모색 토론회

직접 참여 아닌 투표 독려·감시자 역할 해야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오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시민후보 추천 등 직접적인 선거운동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9일 오후 동구 광주YMCA 백제실에서 '2014년 지방선거와 시민사회 역할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광주 시민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시민사회가 그동안 선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부분열과 신뢰상실 등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시민사회가 시민후보 추천 등 선거과정에 직접 뛰어들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 신뢰성 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시민사회는 선거기간 동안 불법선거 감시를 비롯한 시민정치교육, 매니페스토, 투표참여 독려, 언론보도 감시 등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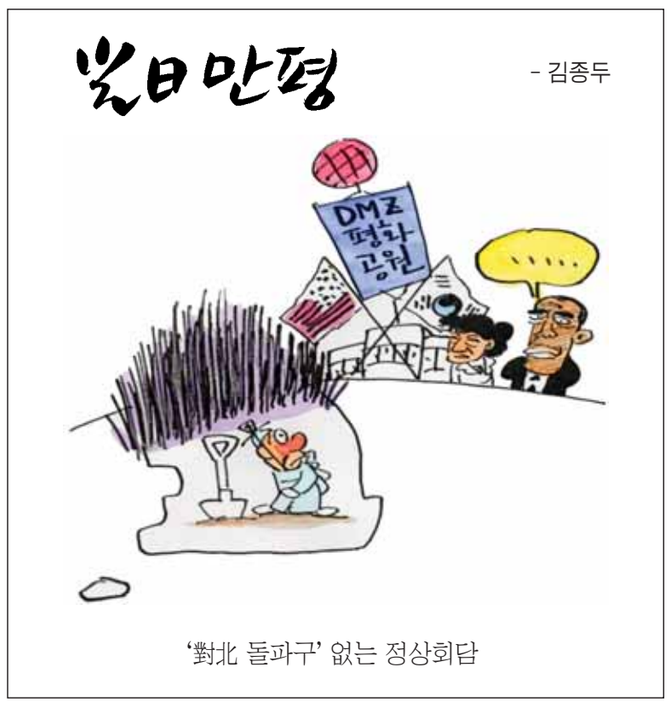
류 교수는 또 민주당의 대안적 정치세력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철수 지지현상은 민주당의 대안적 정치세력 등장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줄수는 있으나, 현재로선 민주당의 대안은 아니다"면서 "일부 지역민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대안세력의 의미보다는 민주당과 동행한다고 판단해서 대두된 현상으로 보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제 2발제자로 나선 김영삼 우리민족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이 2000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으로 큰 파급력을 내기도 했으나, 이후 정치 리더쉽의 한축으로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해 가고 있다"면서 "특히 2010년 이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심판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기존의 사고방식이 시민정치운동, 무소속 시민후보론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고, 선거 대응과 이슈 선점 등이 예전만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시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현장활동 프로그램 등이 없이 활동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선거활동이 이뤄지다보니 단체의 참여와 연대결속이 느슨해지고 지역내 파급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 선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2014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니면 꼭 대응해야 하는 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도 "시민사회가 정책역량을 발휘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참여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정치 참여는 정치적 영향력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여에 앞서 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對北 돌파구' 없는 정상회담